



Issue Briefing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 2차패널조사
유권자 패널의 4.11 총선평가
2012년 4월 23일
정원철_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1. 투표결과와 정당지지

1) 투표결과

- 부산/울산/경남, 민주통합당 후보 찍었다 30.9%
- 광주/전남/전북, 무소속 후보 찍었다 19.1% 통합진보당 후보 찍었다 14.2%

2) 지지후보의 변동

- 새누리당 지지 이탈자 43명 중 23명 민주통합당으로
- 민주통합당 지지 이탈자 68명 중 31명 새누리당으로

3) 지지후보 결정요인

- 정당요인 18.2%에서 29.3%로
- 20대와 30대, 이념과 공약에서 소속정당으로
- 40대 이상, 후보의 도덕성에서 소속정당으로

4) 비례대표 투표

- 지역선거 대비 새누리당 0.9% P 상승 민주통합당 7.0% P 하락

5) 지지후보 결정시점

- 1개월 전 지지후보 결정했다, 새누리당 27.2% 민주통합당 20.5%
- 2~3일 전 결정했다, 새누리당 17.3% 민주통합당 26.2%

2. 총선평가와 새누리당의 승리 요인

1) 유권자 패널들의 총선평가

- 4.11 총선, 정책 대결 중심선거였다 43.1%,
- 네거티브 캠페인 심해진 선거였다 56.6%

2) 총선 이슈

- 2위는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 3위는 민간인 사찰과 권력형 비리
- 김용민 후보 막말파문 꼽은 민주통합당 지지자 16.6%

3) 새누리당의 승리 요인

-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잘못해서 38.2%
- 박근혜 위원장이 잘해서 27.5% 새누리당이 잘해서 4.6%



1. 투표결정과 정당지지

- EAI가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한 ‘2012 총선·대선 패널’ 1차 조사에 이어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2차 조사에 참여한 유권자 패널들 가운데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했다” 고 답한 응답비율은 88.8%(1,447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잠정 집계한 전국 투표율 54.3%와 비교하면 34.5% 포인트(p) 높은 결과이다. 따라서 2차 조사결과는 유권자 일반을 대표하기보다는 정치적 관심이 높고 태도가 적극적인 유권자 패널의 특성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 “투표를 하지 않았다” 고 답한 11.2%(187명)를 살펴보면, 그 이유로 “회사나 집안일로 시간이 없어서”가 54.7%로 가장 높았다. “투표해봐야 바뀌는 것이 없어서”가 10.2%였다. “누가 당선될지 뻔해서”와 “찍을만한 사람이 없어서”가 각각 8.5%와 8.0%였다. 이 밖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2%였으며 “아직 누가 나왔는지 알지 못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1.5%였고 기타가 12.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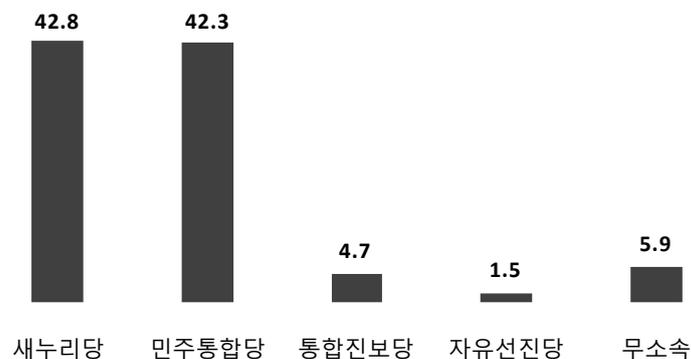
1) 투표결과

부산/울산/경남, 민주통합당 후보 찍었다 30.9%

광주/전남/전북, 무소속 후보 찍었다 19.1% 통합진보당 후보 찍었다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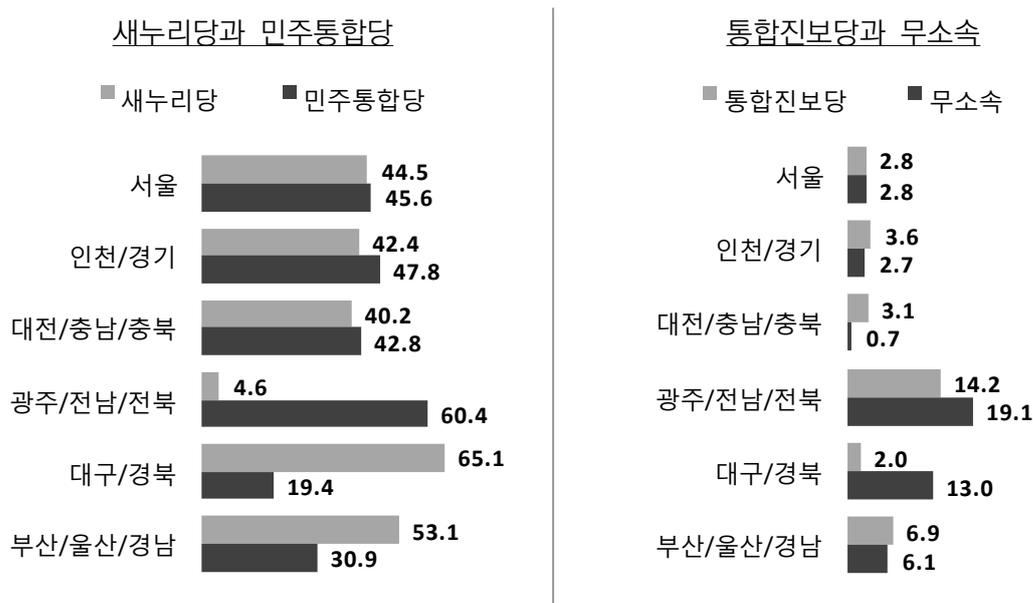
- 유권자 패널들이 선택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소속정당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42.8%였고 민주통합당이 42.3%였다. 통합진보당이라고 답한 응답비율이 4.7%였으며 자유선진당은 1.5%였다.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비율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이은 5.9%로 통합진보당보다 높았다.

[그림1] 유권자 패널들이 투표한 지역구 의원 소속정당(%)



- 전체적인 조사결과에서의 응답비율과 거주 지역별 조사결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수도권을 비롯하여 충청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 또는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비율 간의 차이는 5% 포인트(p) 대를 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경우는 44.5%이고 민주통합당은 45.6%였다. 인천과 경기에서 새누리당은 42.7%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47.8%였다.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도 새누리당 또는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의 차이 역시 크지 않다. 이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응답비율은 40.2%이고 민주통합당이 42.8%였다.
- 수도권과 충청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두 정당 간 응답비율의 차이가 컸다. 우선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지역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비율은 4.6%에 불과한 반면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경우는 60.4%에 달했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비율이 65.1%였으나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19.4%였다.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지역의 경우 새누리당 53.1% 그리고 민주통합당 30.9%였다.
- 통합진보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통합진보당의 경우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 나타난 응답비율은 14.2%였다.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에서는 6.9%였다. 다른 지역에서의 응답비율들이 3% 대 이내라는 결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이다.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의 응답비율이 19.1%, 대구와 경북에서는 13.0%였다.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에서도 6.1%의 응답비율을 보임으로써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응답비율 2% 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그림2] 지역별 투표한 지역구 의원 소속정당(%)



주) 강원과 제주의 경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패널의 수가 66명에 불과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2) 지지후보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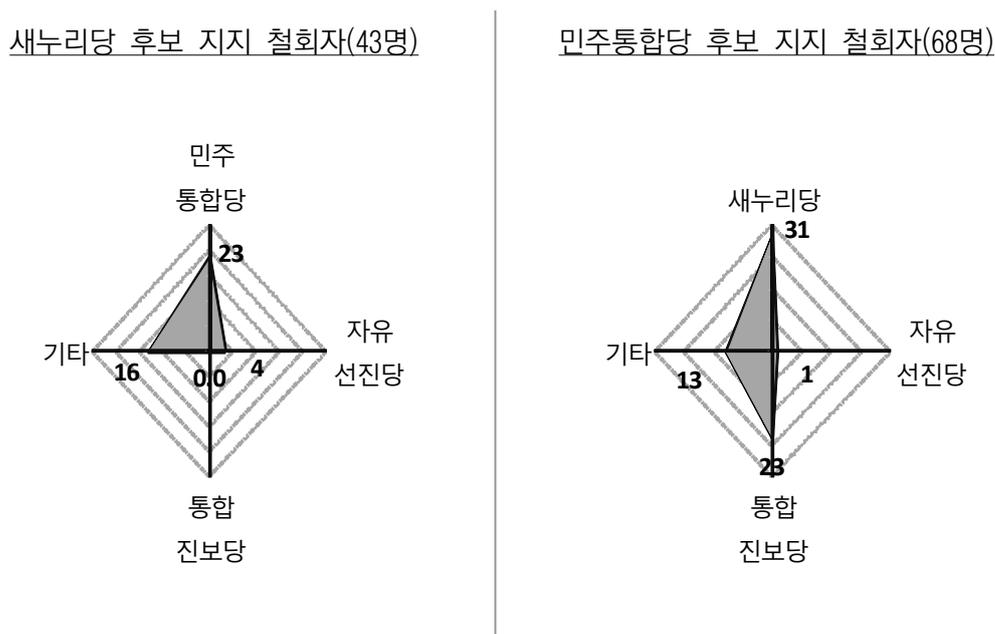
새누리당 후보 지지 유지율 90.0% 민주통합당 83.2%

새누리당 지지 이탈자 43명 중 23명 민주통합당으로

민주통합당 지지 이탈자 68명 중 31명 새누리당으로

- 1차 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 중 2차 조사에도 참여하여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의 비율은 90.0%(총 428명 중 385명)였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83.2%(총 404명 중 336명)이었다.
-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유권자 패널들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10.0%(43명)와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 패널 16.8%(68명)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이탈자들 중 5.4%(23명)가 민주통합당으로 이동했고 0.9%(4명)는 자유선진당으로 그리고 3.7%(16명)가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통합당 이탈자들의 경우 새누리당으로 이동한 경우가 7.7%(31명)로 새누리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지지를 이동한 23명보다 많았다. 통합진보당으로 이동한 지지자가 5.7%(23명)였으며 자유선진당이 1명(0.2%)이었다. 이 밖에 무름/무응답의 0.5%(2명)를 제외한 나머지 3.0%(13명)가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이탈 유권자 패널의 이동결과(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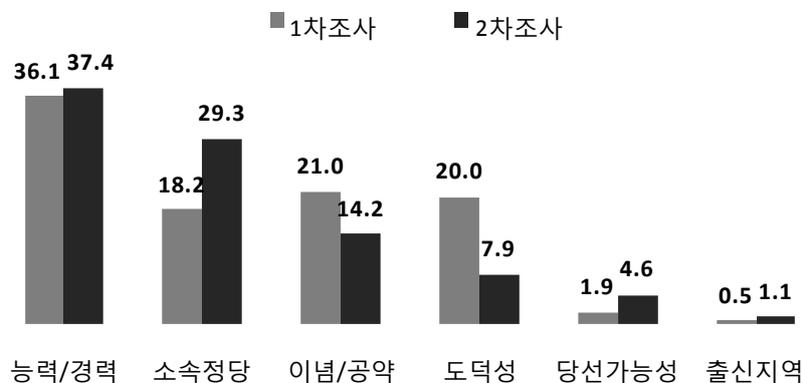
3) 지지후보 결정요인

정당요인 18.2%에서 29.3%로

후보의 이념/공약 21.0%에서 14.2%로, 도덕성 요인 20.0%에서 7.9%로

- 투표기준을 살펴보면 <여론브리핑 110호> “2012 총선·대선 1차패널조사의 주요 결과”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후보의 소속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영역을 꼽은 비율이 2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높았다. 그러나 후보의 소속정당을 꼽는 응답비율이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유권자 패널들을 대상으로 투표기준에서 ‘후보의 소속정당’을 꼽은 응답비율이 29.3%로 4월 9일 발표한 1차 조사결과 당시 18.2%와 비교하여 11.3% 포인트(p) 증가했다.
- 후보자 개인의 영역들이 얻은 응답비율들이 정당요인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았지만 후보의 능력과 경력의 37.4%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응답비율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의 이념과 공약이 1차 조사에서의 21.0%에서 14.2%로 그리고 후보의 도덕성은 각각 1차 조사에서의 20.0%에서 7.9%로 각각 6.8% 포인트(p)와 2.1% 포인트(p) 줄었다.

[그림4] 지지후보 결정 요인 비교(%)



20대와 30대, 이념과 공약에서 소속정당으로
40대 이상, 후보의 도덕성에서 소속정당으로

- 거주 지역과 연령대를 기준으로 1차 조사결과와 2차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지지후보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거주 지역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곳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였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경우 1차 조사에서 후보의 소속 정당을 투표기준으로 답한 비율이 9.8%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28.4%로 나타남으로써 18.6% 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도 10% 포



인트(p) 이상의 응답비율 증가세가 나타났다.

- 반면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의 경우와 광주와 전라 지역의 경우 각각 7.3% 포인트와 4.7% 포인트(p) 증가함으로써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지지후보 결정에서 정당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 1차 조사결과와 2차 조사결과에서 정당요인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10% 포인트(p) 내외의 고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세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정당요인의 상승과 맞물려 하락한 요인에 일정한 차이를 드러낸다. 20대와 30대의 경우 '후보의 이념과 공약'의 낙폭이 모두 10% 포인트(p) 이상이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5% 포인트(p) 이하로 낙폭은 축소된다. 대신 이들 40대 이상의 경우 '후보의 도덕성'을 꼽는 비율이 10% 포인트(p) 이상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지후보 결정에 있어 20대와 30대는 후보의 이념과 공약이 소속정당으로 그리고 40대 이상에서는 후보의 도덕성이 소속정당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표1] 거주 지역 및 연령대별 지지후보 결정요인 비교(%)

		후보의 소속정당		후보의 능력과 경력		후보의 도덕성		후보의 이념과 공약		후보의 당선가능성		후보의 출신지역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거주 지역	서울	18.0	32.2	32.7	34.3	19.3	5.8	25.5	16.4	2.6	4.1	0.3	0.6
	인천/경기	23.0	33.3	30.8	28.9	21.3	9.5	21.6	17.5	0.7	3.7	0.5	1.8
	대전/충북/충남	15.6	25.5	44.2	44.3	20.1	8.8	18.2	13.1	1.3	3.4	0.0	0.0
	광주/전북/전남	9.9	14.5	41.7	59.1	27.8	6.6	14.6	9.5	2.6	5.7	0.7	0.7
	대구/경북	9.8	28.4	39.2	41.4	20.3	8.7	21.6	12.3	2.6	3.4	2.0	1.9
	부산/울산/경남	22.5	29.8	40.3	35.9	12.7	8.0	21.2	10.8	1.3	7.4	0.0	1.3
연령대	19~29세	15.6	27.7	19.5	26.8	19.1	9.6	43.4	25.1	0.4	4.4	0.4	2.4
	30대	17.7	30.5	30.2	34.3	16.3	6.9	29.5	18.6	2.4	5.2	0.3	0.3
	40대	19.5	30.8	34.9	35.4	22.8	10.3	18.3	13.9	2.1	3.4	0.9	0.3
	50대	16.3	25.1	36.9	45.7	21.5	6.7	11.5	10.3	1.4	4.5	0.3	1.6
	60세 이상	20.7	31.5	45.8	42.1	19.7	6.4	6.9	6.3	3.1	5.5	0.6	1.5

주) 기타와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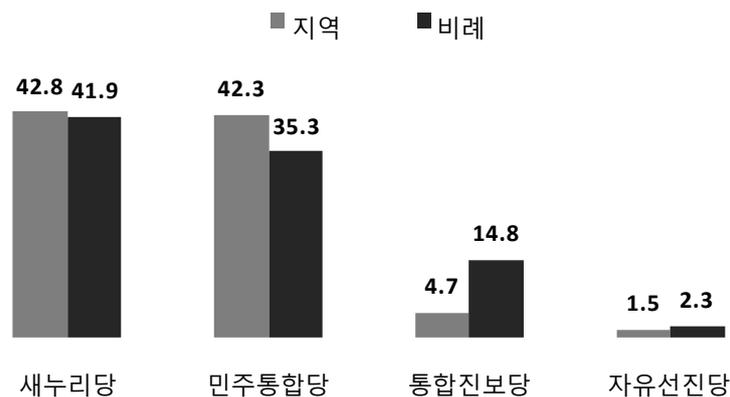


4) 비례대표 투표

지역선거 대비 새누리당 0.9% P 상승 민주통합당 7.0% P 하락

- 비례대표 투표에서 새누리당을 선택한 유권자 패널들은 41.9%이다. 이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42.8%가 새누리당을 선택했다는 응답비율과 비교하면 0.9% 포인트(p) 상승한 결과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35.3%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42.3%와 비교하여 7.0% 포인트(p) 감소하였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14.8%의 응답비율을 보임으로써 지역구에서의 4.7%보다 10.1% 포인트(p) 증가했다. 이와 같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통합당의 응답비율이 감소하고 통합진보당의 응답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지역구 선거에서 나타난 후보단일화 효과가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림5] 지역과 비례 투표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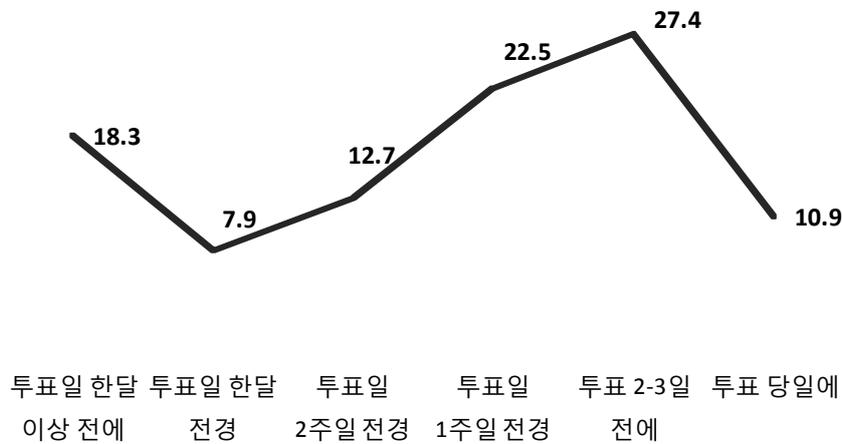
5) 지지후보 결정시점

“투표일 1주일 전에 지지후보 결정했다” 60.8%

- 지지후보 결정 시기를 조사한 결과 “투표일 1주일 전 경 이내” 라는 응답비율이 모두 60.8%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표일 1주일 전 경이 22.5%, 투표 2~3일 전에 27.4%였으며 투표 당일이라고 답한 경우가 10.9%였다. 반면 “투표일 2주 전 이상” 이라고 답한 경우는 총 38.9%였다. 이 가운데 투표일 2주일 전인 후보자 등록 직후였다고 답한 경우는 12.7% 그리고 투표일 한 달 전과 그 이전이라는 응답비율은 각각 7.9%와 18.3%였다.



[그림6] 지지후보 결정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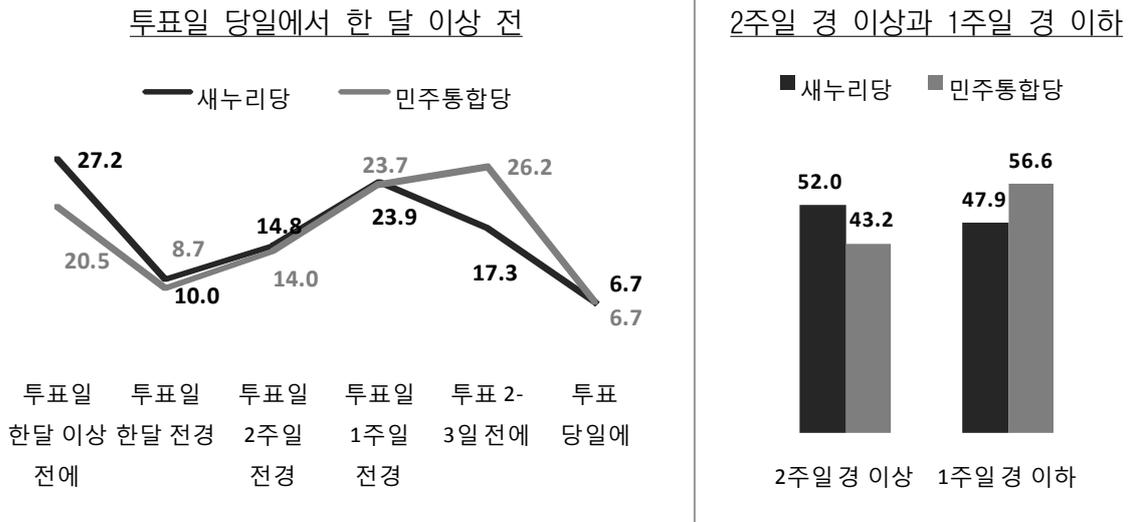
주) 모름/무응답 0.3%는 분석에서 제외

1개월 전 지지후보 결정했다, 새누리당 27.2% 민주통합당 20.5%
2~3일 전 결정했다, 새누리당 17.3% 민주통합당 26.2%

-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참여한 유권자 패널들을 대상으로 4.11 총선에서의 지지후보 결정시기를 살펴보았다. 우선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 27.2%가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지지후보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투표일 한 달 전 경이라는 응답비율이 10.0%였고 투표일 2주일 전 경이 14.8%였다. 결과적으로 투표일 2주일 전 경 이전에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유권자 패널의 비율은 52.0%다. 투표일 1주일 전 경에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결정한 비율은 23.9%였다. 투표일 2~3일 전이 17.3% 그리고 투표당일이 6.7%로 투표일 1주일 전 경 이내에 투표결정을 했다는 응답비율은 모두 47.9%다.
-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후보결정 시기를 살펴보면 한 달 이상 전이라는 응답 비율은 20.5%였다. 한 달 전 경이 8.7%였고 2주일 전 경이 14.0%다. 따라서 투표일 2주일 전 경 이전에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결정을 한 유권자 패널의 비율은 모두 43.2%다. 투표일 1주일 전 경이라고 답한 응답비율은 23.7%, 2~3일 전이 26.2% 그리고 투표당일은 6.7%였다.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 중 투표 1주일 전 경 이내에 투표결정을 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모두 56.6%가 된다.



[그림7]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자들의 투표결정 시기(%)



주) 모름/무응답 0.3%는 분석에서 제외

2. 총선평가와 새누리당의 승리 요인

1) 유권자 패널들의 총선평가

4.11 총선, 정책 대결 중심선거였다 43.1%,
네거티브 캠페인 심해진 선거였다 56.6%

- 이번 선거가 정책대결 중심의 선거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43.1%의 유권자 패널들이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반면 54.2%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민주통합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모두 65.5%였으나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서의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모두 35.4%에 불과했다.
- 정부와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30.3%가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했으며 65.5%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지지정당에 따른 응답비율의 차이는 여기서도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자 중 그렇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모두 19.3%였으나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응답비율은 38.3%였다.
- 지역주의가 약해진 선거였다에 대해서는 41.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했으며



56.2%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의 49.8% 그리고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40.6%가 그렇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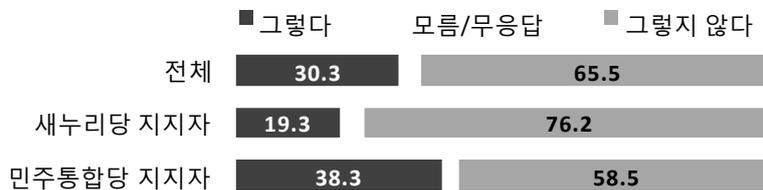
-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 간 비방 정도가 더 심하였다는 평가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56.6%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4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에 따라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자 중 57.0%가 그리고 민주통합당 지지자 중 56.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함으로써 다른 총선 평가 항목들에서 나타나는 응답비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8] 항목별 총선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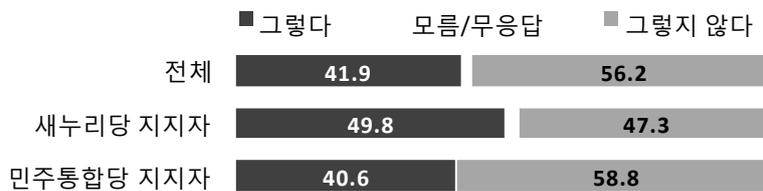
정책대결 중심의 선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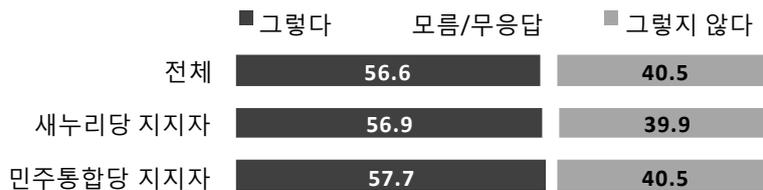
정부와 대통령 개입이 더 심하였다



지역주의가 약해진 선거였다



후보들간 비방 정도가 더 심하였다



2) 총선 이슈

2위는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 3위는 민간인 사찰과 권력형 비리, 1위는 지역발전과 지역공약
김용민 후보 막말파문 꼽은 민주통합당 지지자 16.6%

- 총선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에 대한 유권자 패널들의 응답들을 살펴보면 1위는 18.0%의 응답비율을 나타낸 “지역발전과 지역공약” 이었다. 2위는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 으로 응답비율은 17.2%였으며 3위는 “민간인 사찰과 권력형 비리” 로 14.5%였다. “경제성장” 이 12.1%로 4위, “복지이슈”와 “한미 FTA”가 8.3%로 공동 5위였다. 이 밖에 “야권통합” 과 “북한의 안보 위협” 이 7.2%로 같은 응답비율을 나타냈으며 “재벌개혁” 과 “문대성 후보 논문표절” 의 응답비율이 각각 3.7%와 1.4%였다.
-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2차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슈는 지역발전과 지역공약(19.8%) 및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19.5%)이었다. 경제성장(16.8%), 북한의 안보위협(11.7%), 한미 FTA(9.2%)에 대해서도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민간인 사찰과 권력비리(23.4%) 및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16.5%)이었다. 지역발전과 지역공약(16.1%), 경제성장(9.2%) 그리고 복지이슈(8.3%)를 꼽는 경우들도 많았다.
-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2차 조사결과와 1차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통합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비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장 크게 응답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이슈는 “복지이슈” 에서이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경우 5.7%에서 7.8%로 2.1% 포인트(p) 응답비율이 증가하고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10.8%에서 8.3%로 2.5% 포인트(p) 줄어들었을 뿐 다른 이슈에서의 응답비율 변화는 모두 2%대 이내였다.

[표2] 지지정당별 이슈요인(%)

		한미 FTA	재벌개혁	지역발전/지역공약	민간인 사찰과 권력비리	야권통합
전체		8.3	3.7	18.0	14.5	7.2
새누리당 지지자	1차 조사	10.0	2.7	19.3	4.3	6.0
	2차 조사	9.2	2.6	19.8	4.0	5.6
민주통합당 지지자	1차 조사	6.7	5.0	17.4	21.7	8.6
	2차 조사	7.1	5.0	16.1	23.4	7.0
		북한의 안보 위협	경제성장	복지 이슈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	문대성 후보 논문표절
전체		7.2	12.1	8.3	17.2	1.4
새누리당 지지자	1차 조사	13.5	16.6	5.7	19.4	0.4
	2차 조사	11.7	16.8	7.8	19.5	0.5
민주통합당 지지자	1차 조사	3.8	8.4	10.8	15.1	1.2
	2차 조사	3.5	9.2	8.3	16.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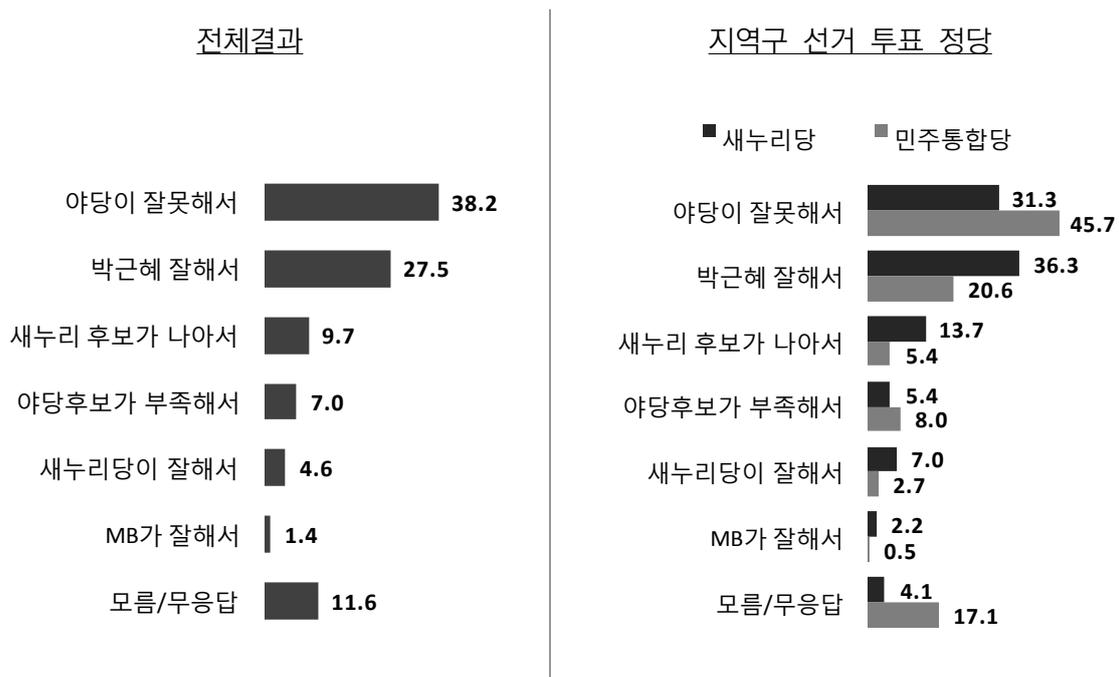
3) 새누리당의 승리 요인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잘못해서 38.2%

박근혜 위원장이 잘해서 27.5% 새누리당이 잘해서 4.6%

- 4.11 총선에서 152석의 의석을 얻은 '새누리당의 승리 이유'에 대해 유권자 패널들은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잘못해서”를 38.2%로 가장 많이 꼽았다. “박근혜 위원장이 잘해서”가 27.5%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후보요인을 꼽는 응답비율은 낮았다. “새누리당 후보가 나아서”나 “야당후보가 부족해서”를 꼽은 경우는 각각 9.7%와 7.0%였다. “새누리당이 잘해서”라는 응답비율은 4.6%에 불과했다.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과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우선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은 박근혜 위원장이 잘해서를 꼽는 경우들이 가장 많아 36.3%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잘못해서는 31.3%, 새누리당 후보가 나아서가 13.7% 그리고 새누리당이 잘해서가 7.0% 순 등이었다.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이 꼽은 새누리당이 승리한 이유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잘못해서를 꼽는 경우가 45.7%로 가장 많았다. 박근혜 위원장이 잘해서가 20.6%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밖에 모름/무응답이 17.1%, 야당후보가 부족해서가 8.0%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가 나아서가 5.4% 순 등이었다.

[그림9] 새누리당 승리 요인(%)



2012 EAI 여론분석센터 연구 성과

- EAI 여론브리핑 111호 “여야 경합국면의 원인과 전망” 정한울 (2012. 4. 9)
 EAI 여론브리핑 110호 “2012 총선·대선 1차패널조사의 주요 결과” 정원철 (2012. 4. 9)
 EAI 여론브리핑 109호 “2012 1월 주요 정치지표의 변화” 정한울 (2012. 2. 6)
 EAI 오피니언리뷰 2012-01호 “어젠다를 보면 2012년이 보인다” 정한울 (2012. 1. 5)

2011년 EAI 여론분석 단행본 시리즈

- 여론분석6. 이내영·임성학(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EAI
 여론분석7. 강원택·이내영(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EAI

2011년 EAI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 201103-1호. “역대 정권 레임덕 현상과 4년차 이명박 정부의 과제”, 정한울 (2011. 3. 17)
 201104-1호. “한국사회 이념 무드의 변동과 정치적 함의”, 정한울 (2011. 4. 12)
 201105-1호. “안티 한나라당 세대, 30대의 정치행태 분석”, 정한울 (2011. 5. 10)
 201105-2호. “4.27 재보궐 선거와 중산층의 선택”, 정한울 (2011. 5. 10)
 201106-1호. “한국 정치사회어젠다의 정책선호 지형 : 국민여론과 정치엘리트의 선택”, 정한울·이근수 (2011. 6. 20)
 201107-1호. “서울시민의 무상급식 인식지형 분석과 주민투표 전망”, 정한울 (2011. 7. 25)
 201108-1호. “여론을 통해 본 한미FTA : 국회비준 시기 신중론의 급부상”, 정원철 (2011. 8. 03)
 201108-2호. “무상급식 주민투표 인식 변동 요인과 전망”, 정한울 (2011. 8. 22)
 201109-1호. “SMART(Swing, Middle, Ambivalent, Responsive, Tricky) 유권자가 서울시장 결정할 것”, 정한울 (2011. 9. 21)

2011년 EAI 여론브리핑 시리즈

- 94호. “대통령 취임 3주년 평가 및 집권 4년 전망: 문제는 경제다!” 정한울·정원철. (2011. 2. 21)
 95호. “27개국 국민이 바라본 17개국 파워국가의 국제적 평판” 정한울·정원철. (2011. 3. 7)
 96호. “2011 파워정치인 신뢰도·영향력 조사” 정한울. (2011. 3. 28)
 97호. “4.27 재보궐 선거와 향후 정국 변화 전망” 정한울. (2011. 4. 30)
 98호.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정국 변화 평가: 여야 개혁 기대 못 미쳐” 정한울. (2011. 5.30).
 99호. “향후 10년 한국사회 핵심 정책 분야.” 정원철. (2011. 6. 7)
 100호. “7·4 한나라당 전당 대회와 현 정국 핵심 이슈” 정한울. (2011. 6. 27)
 101호. “최우선 국정아젠다, 경제와 삶의 질 : MB지지 상승과 문재인의 부상” 정한울·정원철. (2011. 8. 8)
 102호. “주민투표 이후 복지정국과 계급정치의 부상: 여당 지지층의 박근혜 쏠림 현상과 문재인 신드롬.” 정한울. (2011. 8.29)
 103호. “변질된 안철수 현상과 정당재편의 가능성” 정한울. (2011. 9.26)
 104호. “10.26 서울시 재보궐 선거 전망 : 선거구도의 복합성과 불확실성” 정한울 (2011. 10.6)
 105호. “10.26 서울시 보궐 선거 결과의 의미와 파장” 정한울 (2011. 10.31)
 106호. “한미FTA 비준처리 및 이후 정국” 정한울. (2011.11.28)
 107호. “2011 파워기관 신뢰도·영향력 조사” 강원택·이현우·정원철. (2011.12.15)
 108호 “2012 대선 D-1년 여론과 향후 대선 전망.” 정한울. (2011.12.19)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 · 대선 패널조사"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패널조사의 성과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 를 진행한다. 조사 횟수는 4월 11일 총선과 12월 19일 대선을 고려한 총 7회이며 이를 위해 총 2,000명의 유권자 패널을 모집하였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1차 조사는 4.11 총선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3월 29일 직후부터 시작되어 조사대상 유권자 패널을 모집하면서 총선 후보 지지와 정당 지지와 같은 투표행태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2차 조사는 4.11 총선 직후에 투표행태, 평가 그리고 대선 후보지지에 대해 묻는다.

대선 150일 전에서 20일 전까지 실시되는 3차 조사에서 5차 조사까지는 12.19 대선과 관련하여 대선 후보 가상대결과 더불어 각종 이슈에 대해 조사한다. 대선 7일 전 진행되는 6차 조사에서는 선거예측과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 그리고 대선 직후에는 마지막으로 7차 조사를 통해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물을 것이다.

〈패널조사의 진행과 주요 조사내용〉



2차 패널조사 개요

조사일시	2012년 4월 12 - 4월 15일 (4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 패널 1,666명
표본추출	지역·성·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학력/직업/자가소유 비율 반영)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2.4%
조사기획	동아시아연구원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www.hrc.co.kr)
패널유지율	83.3% (1차 조사 2,000명 기준)

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권혁용(고려대) 김성태(고려대) 김민전(경희대) 김준석(동국대) 박원호(서울대) 박찬욱(서울대) 서현신(성신여대) 윤광일(숙명여대) 이곤수(EAI) 이우진(고려대) 이현우(서강대) 임성학(서울시립대) 장승진(국민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오승호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